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1.28(금) ~ 2025.12.4(목)

제공일시 2025 12 12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 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1.28(금) ~ 2025.12.4(목)

제공일시 2025 12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트럼프 정부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추진, "미국 산업 경쟁력·국민 건강 저해"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 강화된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포드·제너럴모터스·스텔란티스 등 주요 자동차 기업을 백악관으로 불러 관련 제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됨

- 뉴욕타임스는 정부가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연비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사업을 되살리고 있다”고 발언해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음

- 연비 기준 완화는 미국의 산업 경쟁력과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정책 발표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됨

(비즈니스포스트 2025.12.3)

2. 미·중 희토류 휴전은 ‘허상’…美 방산업체, 유럽 희토류 재고 ‘싹쓸이’ 구매 쇼크

- 미·중이 희토류 무역 분쟁에서 잠정 휴전에 합의했음에도 미국 방산기업들이 유럽 내 희토류 재고를 대규모로 선점하며 공급망 경쟁이 오히려 격화되고 있음

- 미국 업체들은 자금력과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3~4일 만에 계약을 마무리하는 속도전을 펼치는 반면, 유럽은 행정 절차와 자금 부족으로 3~4주가 소요돼 확보 경쟁에서 밀리고 있음

- 블록체인·경제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미국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금력이 유럽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5.12.3)

3. 깐깐해진 호주 '환경법'…대형 자원프로젝트 '배출공개' 의무화

- 호주가 25년 만에 환경보호·생물다양성보전법(EPBC)을 전면 개정해 대형 개발·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며 국가 환경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음

- 개정안은 대형 프로젝트의 배출 정보 공개, 독립 규제기관 신설, 산림훼손 방지 및 멸종위기종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하며 광산·LNG·에너지 사업자는 승인과 운영 과정에서 배출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정부는 이번 개편이 환경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라고 강조하며 필요시 추가 감축계획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음

(뉴스트리 2025.12.1)

국내 정책

1. 2030년 육상풍력 6GW 보급…발전단가 낮추고 터빈 300기 공급

- 정부가 2030년까지 육상풍력 발전 용량을 6GW까지 확대하고 발전단가를 1kWh당 150원 수준으로 낮추며, 국산 터빈 300기 이상을 공급해 외산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범정부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하며 입찰 확대와 민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기반으로 2035년까지 육상풍력을 12GW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음

- 정부는 중장기 육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며, PPA 전용 중개시장은 내년에 개설될 예정임

(더팩트 2025.12.3)

2. 공기열에너지, 마침내 재생에너지로 인정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음

- 기존 제도는 수열·지열만 온도차에너지로 인정해 왔으나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범위를 수열·지열 + 공기열로 확장해 히트펌프 기반 난방전환과 탄소 감축 효과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시행령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는 방식으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음

(에너지데일리 2025.12.10)

3. V2G 추진 협의체 5일 출범…한전·현대차 등 38개 기관 참여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V2G(Vehicle to Grid) 추진 협의체가 출범해 한전·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정부·지자체·전력기관·자동차·중전기·ICT 기업·학계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했음

- 기후부는 5일 'V2G 상용화 전략 추진 협의체' 착수회를 열어 협의체 창립을 선언함. 기술·법제·시장 전 영역에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임

- 이번 협의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주도 V2G 상용화 전략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전기신문 2025.12.3)

글로벌 기업

1. NRC 안전성 평가 한 달 조기 통과…테라파워 차세대 원전, 내년 착공 가시화

-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주요 안전성 평가를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통과함. 와이오밍주 케머러에 추진 중인 345MW급 나트륨 원자로가 내년 2월 건설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테라파워는 이번 평가가 사업 추진의 핵심 단계라고 밝히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건설 착수 의사를 밝혔음

(임팩트온 2025.12.3)

2. 영국 FTSE 250, 기후공시 3년 진전에도 스코프3·장기목표 '구멍'…금융권 검증률 7%

- 영국 FTSE 250 기업들이 지난 3년간 기후 관련 공시와 넷제로 약속을 확대했음에도 실제 탄소 감축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보고서에서는 이들 기업의 연간 배출량이 최소 2억9540만톤으로 집계됐음

- 컨설팅사 에덴세븐은 공시 수준의 개선과 달리 스코프3 정보, 장기 감축 목표, 금융권 검증 비율이 매우 낮아 실질 성과와 신뢰성 측면에서 큰 격차가 있다고 분석했음

(임팩트온 2025.12.3)

3. 신일본제철, 미국에 신규 전기로 제철소 부지 물색…한국은?

- 신일본제철이 올해 US스틸 인수 이후 미국에 300만톤 규모의 신규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추진함. 내년 하반기 후보지를 압축한 뒤 2027년 초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임

- 글로벌 탈탄소 압력과 중국산 저가 철강 확대를 배경으로 미국 내 친환경 철강 생산 투자를 강화하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상황이 비슷한 국내 철강 기업들도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임팩트온 2025.12.2)

4. '대량 감원' 아마존 직원 1000명 "AI 개발이 일자리에 피해"

- 아마존 직원 1000여 명이 공개서한을 통해 초고속 AI 개발이 민주주의와 일자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음. 아마존은 이미 AI 혁신 대응을 이유로 1만4000명 감원을 단행한 상황임

- 서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직원 2400여 명도 동참해 기업의 AI 전략이 기후 목표를 뒤로 미루고 노동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음

(조선일보 2025.12.1)

국내 기업

1. '발등의 불'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직격탄…"5년간 비용부담만 27조원"

- 한국경제인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화와 배출권 사전 할당량 축소로 인해 산업계가 2026~2030년 사이 약 26조9000억원의 배출권 구매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음

- 특히 발전 부문의 비용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업종별로는 철강 분야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1조3756억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음

(헤럴드경제 2025.12.3)

2. 대한항공, 현대로템과 손잡고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 개발 착수

- 대한항공과 현대로템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관리하는 '재사용 발사체용 35톤급 메탄 엔진 개발' 사업에 착수해, 착수회에서 단계별 기술 검증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음

- 대한항공은 이번 개발에서 메탄 엔진의 핵심 구성품인 터보펌프를 담당하며 재사용 발사체 기반 기술 확보에 본격 나섰음

(이코리아 2025.12.3)

3. 삼성전기, 멕시코 '카메라 모듈' 투자 재개…북미 전기차 공급망 겨냥

- 삼성전기가 관세 변수로 중단됐던 멕시코 카메라 모듈 공장 건설을 재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투자 규모와 시점 등 세부 계획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북미 전기차 및 완성차 시장에서 카메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공장 가동 시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7년 무렵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뉴데일리경제 2025.12.2)

4. "AI 연산 속도 향상" SK하이닉스, 中서 '뉴로모픽 반도체 소자 및 제조' 특허 확보

-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CNIPA)은 SK그룹 계열사들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출원한 특허 68건을 승인했음. 이 중 SK하이닉스가 39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확보했음

- SK하이닉스가 확보한 특허에는 뉴로모픽 소자 기술이 포함돼 서버·데이터센터용 AI 칩 성능 향상과 차세대 AI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엠투데이 2025.12.2)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11.28(금) ~ 2025.12.4(목)

제공일시 2025 12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초가공식품, 드디어 첫 소송…코카콜라·펩시코를 향한 '담배소송 모델'이 열린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초가공식품(UPF)이 비만·당뇨 등 공중보건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대형 식품기업 10곳을 상대로 첫 정부 주도 소송을 제기했음

- 소송은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과 공중위해법 위반을 근거로 ▲코카콜라 ▲펩시코 ▲크래프트 하인즈 ▲몬델리즈 ▲제너럴 밀스 ▲켈로그 ▲포스트 홀딩스 ▲네슬레 USA ▲마스 ▲콘아그라 브랜즈가 피소됐음

- 소송장은 초가공식품을 강한 풍미와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규정하며, 담배회사가 과거 식품기업 인수 후 마케팅 기법을 이식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음

- 담배소송과 유사하게 기업이 유해성을 알고도 숨겼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소송장은 크래프트 하인즈의 전신 기업에서 1999년 임원이 초가공식품 소비로 매년 3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사회적 비용이 최대 1000억달러에 이른다고 경고했지만 경영진이 이를 무시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음

-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송 발표 직후 관련 기업 주가가 하락했고, 담배소송처럼 대규모 합의금 부담 가능성이 시장에서 언급됐다고 보도했음

- 미국에서 초가공식품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법원이 질병과 제품 사이의 인과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가 있어 이번 소송의 향방은 과학적 증거 축적 여부에 달려 있다고 평가됐음

- 소비자브랜드협회는 초가공식품에 합의된 과학적 정의가 없다며 소송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음

- 반면 예일대 보건대학원과 의학저널 란셋은 초가공식품 섭취가 비만·당뇨·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반복돼 왔다고 설명하며 건강 위험을 강조했음

-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AB1264를 통과시켜 학교 급식에서 특정 초가공식품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2035년부터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했음

(임팩트온 2025.12.3)